

<발제> 동북아미래포럼(현대경제연구원, 중앙일보)

2010. 4. 20 롯데호텔37층

보다 솔직한 토론을 위하여...

서언

예정대로라면 저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태와 금강산 관광 문제로 남북관계 방향과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천안함 침몰의 원인조차 아직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제게는 너무나 벅찼습니다.

대통령의 국민통합특보라는 직책과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차제에 천안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면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해야 할 바른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고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 측의 소행에 의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북관계가 또 다시 극단적인 대치국면으로 치닫는 역행(逆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 때문입니다.

모처럼 이룩한 화해와 안정을 부득이 유보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또 밝혀질 것입니다. 그 경우 과연 우리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조심스럽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사계(史界)의 권위자이자 전문가인 여러분과 더불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최근의 보도를 보셨겠습니까만 일부시민단체가 도심에서 시위를 하면서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삼류소설을 쓰고 있다” “북 풍몰이를 위한 광풍제조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천안함 사태는 그것이 외부충격에 의한 것이건, 아니건 안보상의 경고사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남북대치상황이 빚어낸 결과요, 초계함의 침몰은 분명히 안보상의 타격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상당한 심증이 가는데도

물증을 비롯한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애써 자제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자세입니다.

대통령이 초기에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보다는 늦더라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심을 받는 측이
변명할 수 없도록 완벽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고 말한 점
은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현장까지
가서 군인들을 격려한 것 역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공포조장’이니 ‘북풍몰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심각한 안보불감증의
발로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고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언제부터인가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릅니다.

사사건건 모든 문제에 대립합니다.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가 매일 싸우면서 공존하
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양쪽으로 분열된 공동
체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하에서 어
떻게 효율적으로 안보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
제를 놓고도 여러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천안함 사태의 바람직한 귀결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소중한 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탁과 제안을 드리면서 먼저 몇 가지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양극화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도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험신호라고 볼만한 조짐이나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 하게도 이와 같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서민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였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정치적 양극화와 이념적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양극화의 경우 대립과 분열을 넘어 사회가 안정되면 나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큰 나라’와 함께 ‘따뜻한 나라’를 지향하는 정책이 나오면 국민은 정서적으로 따라서 따뜻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는 뿌리가 깊고 다분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쉽게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는 정치적, 이념적 양극화가 경제적 양극화보다 훨씬 더 고질적이며, 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안위와 국민통합에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국가중 꼴찌에서 2-3등을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연간 300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갈등에 따른 법치주의 파괴행위만 극복되어도 국민소득이 몇 %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갈등이 보다 활력 있는 사회를 위한 건강한 갈등이 아니라, 국력을 소모시키는 파괴적인 갈등이라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나라가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앞서 여러 단체가 모여 ‘북풍몰이’니 ‘공포조장’이니 하는 집회를 하고 나면, 보수단체들은 그에 반대되는 집회나 행위를 하여 맞불을 놓습니다.

어떤 단체가 「친일인명사전」을 펴낸데 대한 대응으로 「친북인명사전」을 펴낸다고 합니다.

강(強)에는 강, 이에는 이, 하는 식으로 맞불작전이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습니다.

4대강 문제만 하더라도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이 나라, 이 국민을 사랑하고 있는가, 누가 더 국민민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내 놓을 수 있느냐를

놓고 정의로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길로 가면 나는 이 길로 간다는 식의 분열과 적대가 여.야의 존립근거이자 명분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정당 안에, 여.야간에 건강한 정책토론은 사라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1단 기사 하나를 놓고도 그 행간(行間)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야당 당수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은 ‘정치현안’ 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보도하면서 진천에서 황새가 농약먹고 죽은 것은 대문짝만하게 머리기사로 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뜻있는 한 언론인이 쓴 1단짜리 기사가 더욱 빛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와 정권 사이에 더 이상 긴장된 길항관계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언론도 이 나라 이 공동체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놓고, 언론 간에 또는 정부와 언론 사이에 고뇌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언론 또한 양분되어 있습니다.

팩트(fact)는 하나인데, 그것을 보고 보도하는 태도는 천양외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 가지 신문만 보고는 사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 신문 두 개를 놓고 대조해 가면서 읽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종시 문제, 4대강 문제, 그리고 천안함 사태를 놓고도

보는 눈과 보도하는 태도는 철저하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로마인 이야기」를 나오는 족족 사서 모두 읽었다는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대한 분량의 「로마인 이야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그토록 오랫동안 강성하게 수 있었던 저변의 이유 그 첫째는, 로마가 ‘끊임없이 영토를 확대하고, 통치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편입된 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로마의 시민이 된 것을 자랑과 긍지로 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통합을 잘 이루어 냈기 때문에, 통합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토록 오래 강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흡수된 지역의 주민이 차별과 굴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이 됐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국민통합이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패를 지어 싸우고, 국회가 처절한 싸움터가 되고, 이념으로 갈라지고 지역으로 나뉘며, 모든 사회계층이 내 몫 찾기만을 위하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점철되는 가운데서는 결코 강한 대한민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화두는 「통합, 그리고 전진」

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없이는 전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각계약진만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국민통합이 지금처럼 절실한 때가 없습니다.
특히 천안함 사태를 놓고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로마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지도자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의 로마 지도자들은 자신의 안위나 인기보다는, 로마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돌보거나, 자신의 인기 따위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힌 것은 내 손으로 뚫고, 굵은 것이 있으면 펴고, 장애가 있으면 자신이 앞장서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발목 잡는 것이 있으면 후세를 위해 내 자신을 던져 그것을 뿌리쳐 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자세는 바로 자신의 인기나 안위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이건 아니다”라고 결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이미 결정을 해놓은 행정복합도시안을 그대로 받아드리면 탈었고, 또 편안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수도분할은 안된다”, “지난 대선 때 내가 잘못 공약했다”고 사과까지 한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었지 결코 잘못된 결정이나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백년대계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로

그리고 건강한 토론보다는 일방적 편가르기와 반대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과 세종시 문제를 연결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세종시에 이 나라의 모든 정부부처(또는 일부 정부부처라고 해도 관계 없습니다.)가 가있는 상황 속에서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경우, 과연 국민들이 지금처럼 태평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백령도에 달려가고 잘하건 못하건 중앙부처가 가까운 서울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런대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종시가 사실상 수도가 되어 있었다면, 과연 국민이 그렇듯 태평하게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찍이 1977년, 명동성당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투옥되어 있을 때, 부인 이희호여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울 수도이전은 적어도 남북대치상황 아래서는 절대로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嫡子)임을 강조하면서도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인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것만이 오직 목표요, 그것만이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연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재앙으로 갔다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올바르고 바른 길로 나라가 자기행진을 계속할 것이냐가 이런 국가적 현안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 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엄연한 국가적 불행 앞에서 감히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6명에 이르는 전사자가족들이 울부짖고 있는 마당에서 어떻게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과연 이 나라가 하나의 나라, 하나의 공동체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절망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해방 직후 건국시기에 혼란스러운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넘치는 의욕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때는 아직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국가가 구성되기 이전이니까 그와 같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여·야 정권교체를 거듭하면서 엄연히 60년 넘게 한 국가공동체 안에서, 고락과 영욕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와 같은 분열과 인식의 격차는 일찍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 안의 분열과 대립은

명백한 적과의 대립보다 더 위협합니다.

저는 냉전시대를 연상케 하는 라이트(right), 레프트 또는 진보와 보수로 편을 가르고 대립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 해방 무드가 정착 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남북대치와 이념의 장벽이 남아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우리 스스로 그 냉전의 유산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아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가 이 나라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 더 국민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하는 정의로운 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정통적인 보수와 진보의 주장이 뒤바뀌어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진보와 보수, 라이트와 레프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앞에 뉴(New)자를 붙이건 안 붙이건 냉전시대를 연상케 하고, 건강한 경쟁보다는 대립과 분열을 연상케 하는 그런 용어는 이제 폐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분열의 언어, 사라져야 할 언어, 미움의 언어를 추방하는 운동이 언론계로부터 일어났으면 하는 가슴 속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국내외, 민관군(民官軍) 합동조사단에 의해, 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밝혀지면, 그 이후

의 대책마련과 집행을 위해서는 국제공조와 함께 온 국민이 정부를 믿고 일치하여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도 세종시 때처럼 「음모론」을 또는 「책임론」을 들고 나와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북한에게는 물론 국제적인 조소거리가 될 것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천안함 사태의 영예로운 종결이 무엇보다 절실한 이유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이 고비를 -

이명박 정부의 초기 2년간의 대북정책은 크게 보아 조정기였습니다. 그것은 북한에게는 물론, 김대중 정부 이래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명박 정부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지원하면서도 지원을 받아 달라고, 돈도 주고 절도 하는 관계로부터 보다 항구적일 수 있고 실용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언젠가는 한번 꺾어야 할 고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역사의 눈으로 보면 해방 후 역대 권위주의적 정권을 거치면서 적대적 남북대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남북의 대치상황을 역대 독재정권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서 해빙무드와 함께 남북

관계도 적대적 대치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서서히 그 향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민족끼리의 화해와 협력”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것 역시 역사의 큰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그 엄혹했던 냉전시대나 갈라졌던 민족이 서로 협력하고 화해한다는 정서적 열정이 넘쳤던 시대를 지나, 정반합(正反合)의 길, 올바르게 실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길을 찾는 것 또한 시대적 요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옛 시조에 “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감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새로운 길을 인내를 가지고 추구해 오다가 지금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 간 것만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일시적으로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를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도 남(南)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북에서 먼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책적 시도가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로 우리가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북은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남측 정부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단행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남한의 관광객이 북한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죽은 후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남북합동진상조사와 재발방지약속, 관광객의 안전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정부라도 관광객의 신변안전조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관광에 나서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제일가는 책임은 뭐니뭐니 해도 국가안보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국가 대 국가는 물론 남북 간에도 방문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안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끝났다는 식인데, 과연 이것으로 재발방지 약속이나 장치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관광을 재개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성관광이나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할 정부가 지난 날, 남북간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인식하고 또 남북협력의 확대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반드시 짚어야 할 것들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잡아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집행하는 사업자, 현대아산을 위해서도 마땅히 북한이 먼저 보장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북은 자신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조치는 외면하면서, 사업자를 바꾸겠다는 억지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측의 요구를 들은 체도 않고 무조건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 억지가 통하지 않자 아예 남측 돈으로 지은 시설 등을 동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남쪽에게는 협박하면 통한다는 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제적인 기준과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의 억지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아니 북을 위해서도 지난 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천안함 사태의 와중에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북도 문제이지만, 저는 이런 때 일수록 우리가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북을 건강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도 북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보다 영구적이고, 실질적인 남북협력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도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일부 언론이 이만큼 됐으면 이제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북의 억지에 오히려 남이 길들여지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일이관지(一以貫之)할 수 있도록 언론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하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마땅히 가야할 길을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천안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고, 밝혀진 진실을 놓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는가, 또 안보경보상황 아래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국민통합이요, 국민적 합의인데, 이같은 국민통합 또는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 와중에 북한측이 들고 나온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정도인가에 대한 저의 고뇌와 의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역시 이와 유사한 의문과 고뇌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탄없이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